

보 도 자 료

배포 날짜

2026. 7. 1. (수)

총 4페이지

2026년 7월 1일 경남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릴레이 성명발표 12

구 분 보도요청

수 신 각 언론사 여성·아동 담당

발 신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담 당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팀장 한다숨
www.teen-up.com / 02) 6348-1318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 7층

릴레이
성명발표
담당

센터명

경남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총 4장

담당자

이승석 센터장

연락처

055-715-1388

성 명 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은 65%증가,
지원은 3배 이상 폭증했는데,
정부는 언제까지 현장에만 책임을 떠넘길 것인가!

정부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즉각 확충하고 전문 시설 전환을 추진하라!
플랫폼 사업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 방지 책임을 다하라!

디지털 기술의 유례없는 발전과 함께 아동·청소년을 향한 성착취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더욱 교묘하고 악질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 랜덤 채팅 앱을 이용한 성착취, 딥페이크 등은 더 이상 일부 사례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해는 급증하는 반면 이를 지원하는 국가의 대응 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센터 2025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원 센터를 이용한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는 2021년 727명에서 2025년에는 1,226명으로 약 65% 증가하였다. 특히 10세 미만 아동과 10~13세 아동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 규모 증가에 비해 지원 체계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이다. 2025년 지원 센터의 종합 지원 건수는 39,632건으로 2021년 12,520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상담, 심리 치료, 의료 지원, 법률 지원, 학업 지원뿐만 아니라 온라인 모니터링, 온라인·오프라인 아웃리치 활동까지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장의 인력(상담원 3인)으로는 이러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한 명을 지원하는 일은 단순 상담 몇 회로 끝나는 업무가 아니다. 피해 발견부터 긴급 지원, 수사·재판 동행, 심리 회복, 학업 복귀, 자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의 집중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 결국 상담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은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는 더 이상 현장의 헌신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이며, 상담원의 희생과 열정으로 유지되는 구조는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

이에 우리는 아동·청소년들이 홀로 고통받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폭증하는 지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센터의 전문 인력을 즉각 증원하고 전문 지원 시설로 전환해 안정적인 운영 예산을 보장하라!

경남 센터는 도내 18개 시·군 전역의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군 단위 지역은 의료기관과 법률 지원 기관 등 필수 지원 체계가 충

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아 피해 아동·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상담원들은 이러한 지역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이동하며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 상담원 3인으로는 광범위한 권역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원 수요를 감당하기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

더욱이 경남 센터는 대안학교와 청소년 지원 시설 등 관련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어 타 센터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계 의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경남 지역 시설에 입소한 청소년들에 대한 연계 지원 사례와 퇴소한 청소년들의 재유입 및 피해 사례까지 집중되고 있다. 그 결과 경남 센터는 도내 사례뿐 아니라 타 지역의 연계 사례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의 인력 규모로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보호와 회복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적시에 전문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규 전문 인력을 즉각 확충하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센터를 전문 지원 시설로 제도화하여 안정적인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은 예산의 여유가 있을 때 추진하는 선택적 사업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 책무이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 차별 없이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및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지금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 및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강화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채팅 앱과 SNS 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유해 콘텐츠를 즉각 차단하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라!

성착취 피해가 발생하는 주요 경로는 이미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 2025년 지원 통계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 1,226명 중 채팅 앱을 통한 피해가 539명, SNS를 통한 피해가 474명으로 나타났다. 즉, 온라인 플랫폼은 단순한 소통 공간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가 발생하는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 유해 콘텐츠와 그루밍 행위에 대한 예방·감시 체계 역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동·청소년의 안전보다 이용자 수와 수익을 우선시하는 기업의 무책임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실효성 있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를 방치한 플랫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징벌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 또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의심 계정과 콘텐츠를 신속히 차단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고통은 통계 숫자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 숫자 하나하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과 수치심, 불안 속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라.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와 책임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경상남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센터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또한 국가가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성착취(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센터 전국 네트워크**와 연대하며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모든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공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안전하게 살아가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곁에서 함께할 것이다.

2026. 7. 1.

경상남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